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토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의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감사에서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누락된 사실이 통보되자 청구인에게 ○○○○○. ○○. ○.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9,95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 ○. ○.자로 2011년~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393,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내렸다. 청구인은 ○○○○○.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임 대통령 재

임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부과 시효가 지나간 것임에도 현재에 와서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위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를 한꺼번에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대상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어 온 시설물로서, 2015년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 감사’ 시 이러한 점이 지적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전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 ○. ○. ○. ‘누락물건 시설물 조사 및 부과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 ○. ○○.자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 ○. ○.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 ○○. 피청구인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부담금 납부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4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구 ○○동 ○○○-○○ 토지상 건축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시설물은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는 1,012.3㎡ 이다.

2) 인천시 감사관실은 ○○○○.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 ○○. ○○.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누락물건 시설물 조사 및 부과안내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 ○. ○.부터 ○○○○. ○. ○○.기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소급 부과·징수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지하1층이 ○○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미임대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내역에 따라 ○○○○. ○. ○.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부과기간	각 층 바닥면적 합계 (부과면적)(㎡)	단위부담금 (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감면금액(원)	계(원)
○○○○.○.○-○○○○.○.○○	1,012.13	450	소매점 1.68	99,843	348,370
○○○○.○.○-○○○○.○.○○.			일반음식점 2.56	99,843	348,370
○○○○.○.○-○○○○.○.○○.			카센타 1.49	167,330	348,370
○○○○.○.○-○○○○.○.○○.			창고 0.61	79,956	348,370
합계			일반업무시설 1.20 기타 근린 1.44 공장시설 0.47	446,972	1,393,480

4)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2011년 도~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393,480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의2는 단위부담금을, 같은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2는 시설물 용도의 대분류 및 세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1조제1항은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5조제1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2011년도~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만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시효가 지났음에도 부과한 위법이 있고, 4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제1항은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청은 적어도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매년 8월 1일이 된다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 ○. ○.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부과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인 ○○○○. ○. ○.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의 부과만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 ○. ○.자에 부과할 수 있는 ○○○○. ○. ○. ~ ○○○○. ○. ○○.까지의 부담금, ○○○○. ○. ○.자에 부과할 수 있는 ○○○○. ○. ○. ~ ○○○○. ○. ○○.까지의 부담금, ○○○○. ○. ○.자에 부과할 수 있는 ○○○○. ○. ○. ~ ○○○○. ○. ○○.까지의 부담금을 ○○○○. ○. ○. 부과한 것은 제척기간 내의 부담금 부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과시효를 지나 부담금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지난 4년간 누락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전인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 ○. ○.부터 ○○○○. ○. ○○. 기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소급 부과·징수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부담금 일부를 감경하였던 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에 따르면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총 부담금 액수가 5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분할 납부의 대상은 아닌 점,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누락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시 부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 ○. ○. 피청구인에게 한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년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시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